

고양시, 특례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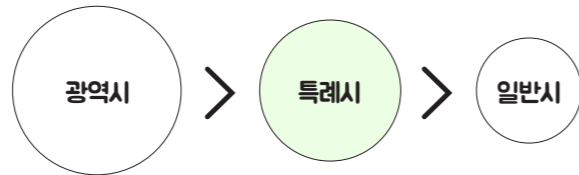
108만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특례시란 무엇인가요?

특례시란, 기존과 같은 '일반 시'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권한을 인정받는 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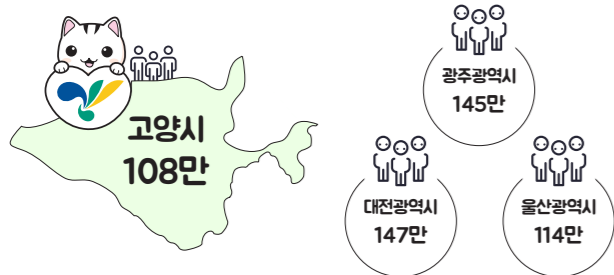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108만 대도시, 고양에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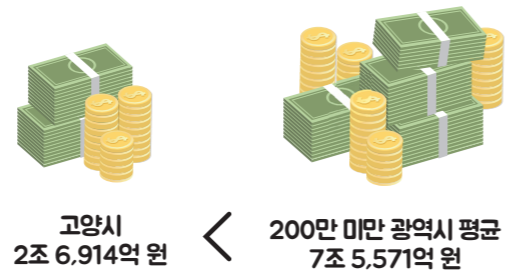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커졌으나 일반 시와 똑같은 자치제도와 조세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자치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지축·향동지구 택지 개발과 함께 머지 않아 우리 시 인구는 울산광역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재정도 필요합니다.



재정규모(2020년 기준)

그것이 궁금하다! 특례시 Q&A

Q1. 특례시는 어떤 권한을 갖나요?

정부와의 직접 교섭으로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용이해집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도시 발전 전략 수립 및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지며(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으로 광역시급 자치권한이 확보됩니다.

Q2. 시민은 무엇이 좋아지나요?

하나, 특례시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대도시기준 적용으로 시민의 복지혜택(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확대되며 학교 교육자치 실현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도서관 확충 등의 복지혜택이 증대됩니다. 행정절차(경기도 미 경유)의 간소화로 신속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를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역시 향상됩니다.

**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고양시 366명, 울산 162명, 울산의 2배 이상*

둘, 자주적 계획수립 추진으로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재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확대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풍요로운 도시로 변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 특례시 사무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은 자치재정력을 강화시킵니다.

행정사무 이양 등을 통한 재정 확충으로 재정 확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Q3. 특례시가 되면 주소가 바뀌나요?

'특례시'는 행정명칭 부여로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부·주소·안내판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Q4.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Q5. 언제부터 특례시가 되나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일(관보게재)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